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69호 2023. 9. 27 (수)

공 포

조례 제1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조례 제16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조례 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조례 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7
조례 제16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10
조례 제162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13
조례 제1630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5
조례 제16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19
조례 제1632호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21
조례 제16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조례 제1634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조례 제1635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조례 제1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조례 제16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조례 제1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조례 제163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고 시

제2023-10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37
------------	------------------------	-----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공 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1명”을 “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은”을 “회의 참석자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임 서

- 소 속 :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 직 책 : *위원*
- 성 명 : (서명)
- 사임사유 :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귀중

비밀 준수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함에 엄숙히 서약한다.

1. 신청사 건립 사항 등에 관한 심의 안건 등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을 인지한다.
2. 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비밀 준수) 규정을 준수하며 임기 중은 물론 임기(해촉)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 제·개정(폐지) 이유

신청사 건립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청사관리 및 회계담당부서와의 유기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원회 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조례 정비가 필요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재무과장을 추가하여 8명을 9명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인원 구성을 22명 이내로 변경함.

○ 제3조(위원의 구성) : 재무과장(청사관리, 회계담당부서) 추가

나. 표준서식 지정 및 회의록 관리 규정을 변경하여 위원회 사무를 효율화함.

○ 제5조(위원의 해촉) 사임서 지정, 제11조(비밀준수) 비밀유지서약서 지정

○ 제8조(간사) : 출석위원 2인 회의록 서명 날인 규정 삭제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2023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북구 소속 공무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사망 시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주요내용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내역 개정(제6조)

-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2023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를 5년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부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특별휴가 부여 규정 개정 (제17조 제7항)

- 5년차 이상 10년차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 부여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북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법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법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의회, 부산북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5(폐지) 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근거로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제4조)
- 다.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대상(제5조~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제7조~제8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신고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감사부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괴롭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허위 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와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제3조~제4조)
-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제6조)
- 라. 고충상담의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제8조)
- 마.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제10조)
- 바. 불이익 조치 금지 등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제12조)
- 사. 괴롭힘 실태조사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제14조)
- 아. 허위신고 (제15조)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북구 내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북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2. 장애인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방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장애인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 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장애인 체육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 다. 장애인체육 동호회, 경비 지원, 운영비 지원(제4~6조)
- 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제7조)
- 마. 준용(제8조)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구 또는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지원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의 적법성과 필요성,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연락처	
행사내용	행사명			
	사용목적 및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행사주관			
	행사기간			
	사용기간			
	행선지 및 경유지			
	탐승인원	명		
<p>북구 공용차량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p> <p>20 . . .</p> <p>기관 · 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p> <p>북구청장귀하</p>				
첨부서류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제·개정(폐지) 이유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나. 지원범위 및 공용차량 지원신청 (제3조~제4조)
- 다. 공용차량 지원검토 및 결정 (제5조)
- 라. 이용자 등의 의무 및 준용 (제6조~제7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 피해·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점검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피해 예방·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다.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제5조)
- 라. 교육,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제7조)
- 마.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제8조)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동자의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2021.11.1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제4조)
- 라.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우리 구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청년의 기준연령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청년 연령의 범위 확대 (제2조제1호)

- (당초) 19세 ~ 34세 이하 ⇒ (변경) 18세 ~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의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기관, 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의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제1~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
- 다.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 육성지원 (제5~6조)
- 라. 포상 (제7조)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 나. 적용 범위를 규정함.(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보조금 지원,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10조)
- 바.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6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안전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안전시설 권장)”을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재난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LPG가스 시설 개선, 안전시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용품 등
2. 제4조에 따른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재난대비 환경을 조성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필요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가. 재난안전제품의 정의(제2조)
- 나. 안전시설 및 재난안전제품 권장(제4조)
- 다. 재정지원 근거 마련(제7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고원식 횡단보도
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6.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엘로카펫)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신설 (제8조)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 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근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나목의 경우 3회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회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 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제·개정(폐지) 이유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기존 부과금액을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 조문 일치(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과태료 처분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근 개정된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부산광역시북구조례제163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 9. 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조문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과 이에 따른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의 제2호 유사경력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중 출산의 일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외의 유사경력 인정기준(제12조)

나. 특별휴가 지급에 관한 사항(제16조제6항, 별표4, 별표5)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0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고시

1.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90호(2023.8.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1-309-45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 사업의 명칭 : 만덕 여가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 여가녹지 조성 A=3,53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구포동)

마. 사업착공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공 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번호	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만덕동	41	답	3,537	3,537	국토교통부		